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일본, 식품 라벨링, 안전, 정책, 성분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일본, 식품 라벨링, 안전, 정책 성분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1. 03. 12
후쿠시마 원전 1호기 폭발,
'대재앙' 오나

2013. 09. 02
한국인 96.6%
"일본산 식품,
방사능 불안해"

2017. 03. 18
중국, 일본 식품
퇴출에 나서...
"방사능 오염 때문"

핵심이슈
도출

“일본 소비자청, 식품 라벨링 기준 일부 개정”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소비자청, 식품 라벨링 기준 일부 개정

일본 소비자청이 '영양 성분 분석 방법'과 관련된 시험 검사에 대해 적절한 관리와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 라벨링 기준 일부를 개정한 <식품 표시 기준에 대한 기준>(169호)를 발표하였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냉동식품 중 생선토막, 어패류(생물 제외)를 동결시킨 것'이라고 적힌 문구는 해당 문구뿐만 아니라 '냉동식품'을 알리는 표기 또한 함께 명시해야 하며, 영양 강화 목적을 위한 첨가제 범위에 '아셀렌산나트륨'이 추가되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식품 성분에 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셀렌산나트륨은 무기형태의 셀레늄 성분으로, 셀레늄은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6년 발표한 일본 내각 정책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중점 시책으로 삼고 있다. 당국은 국제적 동향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한 평가 방법 기획 및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첨가물, 영양 성분 및 특정 보건용 식품에 대한 평가 체제 강화를 통해 일본 식품 안전 리스크 평가가 식품에 대한 자국민들의 신뢰성 향상을 비롯하여 국제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일본에 닥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자국민과 주변국들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짐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가 일본산 제품 퇴출 명령을 내리면서 민간 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의 식품 안전 강화 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 전역이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일본산 제품, 특히 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롯되는 민간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식품 안전 기준 강화 정책으로써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본 정부의 식품 안전 기준 강화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관련 제품 수출입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